



광주천 물대는 폭포 광주·전남지역의 낮 기온이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21일 오후 광주 동구 소재동 광주천 상류에 설치된 인공폭포에서 한 여성이 시원스레 쏟아지는 물줄기 옆을 걸어가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화순군의장 막장 난동

군청 인사에 불만 총무과 집기 부수고 욕설

군의원 2명과 함께...과장은 입원

화순군의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3명이 집행부의 인사에 불만을 품고 군청 사무실에 찾아가 간부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고 있다.

〈관련기사 3면〉

21일 화순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의회의장 조유송 의장과 문행주 총무위원장, 최영호 운영위원장 등 의원 3명은 지난 20일 오후 5시40분께 군청 총무과 사무실에 몰려가 근무중인 안모 과장에게 욕설을 퍼붓고 의자를 집어던져 선풍기와 사무실 집기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들은 30여 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중인 근무시간에 총무과 사무실에 함께 몰려가 화순군이 이날 단행

한 인사를 거론하며, 전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안 과장에게 “너 x×야, 네가 자리보전 할 줄 아느냐”는 등 고성과 욕설을 퍼부었다.

조 의장은 이어 사무실에 놓여 있던 회의용 의자를 들어 안 과장 자리를 향해 던져 화분과 선풍기, 사무실 칸막이 등을 부셨다. 이 과정에서 안 과장이 의자를 피하려다 어깨를 테이블에 부딪혀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안 과장은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이들 의원들을 폭행과 기물 손괴,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안 과장은 “모든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격

적인 모욕을 당했다”며 “군민의 대의 기관이 아닌 시정잡배들 사이에서나 벌어질 일이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버젓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의장 등은 이어 군 인사위원장이 부군수를 찾아가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날 의원들의 난동은 20일 단행된 화순군 사무관 승진 및 전보 인사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들은 의회 사무과 소속 3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졌다고 주장한 반면 화순군 측은 의회 사무과 모 과장을 재부과장으로 전보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장은 “지방자치법 상 의사와 직원 인사는 사전에 의장과 협의하도록 돼 있으나 화순군이 이를 무시했다”며 “화순군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집기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화순군 관계자는 “군수와 의장이 인사협의 차원에서 전화통화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전협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과장이 요직과장으로 발령나지 않은데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화순군의회의에서는 지난해 6월 한 의원이 술에 취해 당직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조 의장이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만큼 사건 진위 파악을 한 뒤 문제가 있다면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당헌·당규 절차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판매시설 들어설 수 없는 부지...용적률 기준 초과 “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 위법”

광주시 주민감사청구 특감... 허가취소·공무원 징계·건축사 고발

광주시가 북구 매곡동 이마트에 대한 북구청의 건축허가 위법이라며 허가취소와 관련 공무원 징계, 건축사 고발 등을 북구청에 요구해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인근 상인들과 시민단체 등이 대형마트의 편법 진출이라며 반발하자 북구청이 허가를 반려, 법정까지 가는 논란 끝에 민간사업자가 신축공사에 착수했으나 정작 북구청은 건축허가 설계도면마저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 조재운 감사관은 21일 ‘북구 매곡동 매곡프라자 건축허가와 관련된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부지에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물론 건폐율과 용적률도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부당한 설계로 건축

허가 받은 건축주에게는 건축법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조 감사관은 또 “북구청에 건축허가 관련 공무원 3명의 징계와 사실과 다르게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사(건축사)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가 지난 1999년 주민감사청구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행정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결과 북구청은 판매시설이 가능한 자연녹지와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혼재돼 있는 부지에 건축사가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 각기 다른 용도의 건축물 2개 동을 짓겠다고 제출한 설계서에 따라 허가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 2개 동의 건축

물이 기초와 벽체 및 지붕 슬라브가 하나로 연결된 동일 건축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또 설계사가 지상 1층(5754㎡)인 판매시설 건축물을 지하 1층인 것처럼 서류를 제출, 전체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건폐율은 78.9%(법정기준 20% 이하), 용적률은 132.5%(60% 이하)로 법정기준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북구청은 이를 간과했다.

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없이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의 연결통로를 임의로 안착한 점, 철골조립식 주차장의 높이가 공작물 기준으로 초과해 허가된 점 등도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6월 북구 주민 131명이 제기한 북구 매곡동 매곡프라자 건축허가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두 달간 특별감사를 실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전남도 공무원 특채비율 전국 최고

민선4기 47.9% 채용...광주시는 승진대상자 미리 결정

감사원 감사 결과

전남도와 시·군이 민선4기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간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절반 정도를 특채로 뽑아 전국 16개 시·도 중 특채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남도는 별정직 공무원을 채용 목적과 다른 부서에 배치하고, 광주시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에 승진대상자를 결정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21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 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5년간 3585명의 공무원을 채용한 전남도(시·군 포함)는 이 중 47.9%인 1718명을, 980명을 뽑은

광주시(자치구 포함)는 28.3%인 277명을 각각 특채로 채용했다. 감사원은 전남의 경우 도·시·지역인 5개 군(해남·고흥·완도·진도·신안)의 지역제한 모집이 특별채용이 이루어졌고,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사무소의 국가공무원 97명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되면서 특별채용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전남도는 8급 상당 재산관리원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했다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직전에 퇴직시킨 후 지방선거 직후에 다시 채용한 후 도지사의 의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채용목적 위배했다가 적발됐다.

광주시는 3급 17명, 4급 63명, 5

급 104명을 승진임용하면서 인사부서에서 승진대상자를 미리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그대로 승진임용했으며 남구에서도 당시 구청장 역시 사전에 승진대상자를 정해두고 인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5급 3명을 승진임용했다. /윤현석기자 chadoll@kwangju.co.kr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대학원 062)605-1115



캐리비안 베이 아쿠아루프 오픈

올여름, 아쿠아루프가 당신을 시험한다!

Hot & Extreme 아쿠아루프 OPEN
20M 수직낙하, 중력가속도 2.5g, 360° 회전인 아찔한 스릴

캐리비안베이 썸머 웨이브 페스티벌
powered by 삼성카드 (7/22~23)

Will I AM, Tiger JK 등 최고의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합작 음악축제

캠퍼스 종강파티

대학(원)생을 위한 에버랜드, 캐리비안베이 특별 우대혜택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everland.com을 참조하세요

